

주최자 개회사

기미야 다다시(도쿄대학교 한국학연구부문 부문장)

이번에 한국에서 <화해 치유 재단>이 설립되고 거기에 일본정부가 10 억 엔을 거출하는 것이 결정되어 작년말 정부간 합의가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오늘 참가자, 청중 여러분 중에는 정부간 합의 자체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는 물론 많은 지원자 분들도 합의자체가 부당하고 문제해결이 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평가하는 사람보다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세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본정부의 법적책임과 그에 바탕한 배상을 요구하는 종래 주장을 전제로 한다면 이 합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이해됩니다.

한편 일본 사회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소감입니다. 일본사회 안에는 위안부 문제 자체를 한국의 반일세론 동원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사회는 일본을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목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어떤 배려를 해도 받아들일 것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뭔가 배려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일이며 오히려 기대를 품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을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그것을 재료로 일본인 전체가 마치 불도덕적인 인간들이 모인 것처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현재 일본사회에는 실은 많지 않을까 상상됩니다. 물론 그것이야말로 “피해망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다만, 왜 일본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인권문제로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다는 의미로 “둔감”한 것일까. 또 다른 의미로 국가의 명예를 훼손되고 있다는 피해자의식으로는 “둔감”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본사회의 반응을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런 이해를 시도하는 것을 통해 그런 인식의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전략을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한 비슷한 지적작업을 한국의 연구자, 운동가를 포함한 분들도 일본에 대해 그리고 한국에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점도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자면 한국사회도 반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일사회 양측의 그러한 자성적인 자세야말로 이 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해결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자주 듣게 된 “역사전” 즉 “역사전쟁”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어느 쪽이 바른가를 경쟁하고 그것을 이국간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해 경쟁한다는 뜻입니다. 최근의 한일관계를 돌이켜보니 역사를 싸우겠다고 하는 용맹한 사람이 한일 양국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근년에는 한일관계가 적어도 일본에서 보면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변용돼 온 것을 보고 일본도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역사전”이라는 발상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간에 대립, 쟁점이 있을 경우, 그 쟁점을 둘러싸고 서로 입장을 주장하고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을 가지는지를 경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한일 “역사전”은 “정전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말 한일정부간 합의는 적어도 “정전협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 “역사전”을 정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령이시고 한정된 시간 안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는 한, 문제가 반영구화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반영구화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리들 기억에 남길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둘러싼 관계악화라는 연쇄의 악순환에는 일단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 “정전협정”에 바탕하여 그것을 “평화협정”으로 발전시킬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전쟁에 관해서는 “정전협정”에 바탕을 둔 정전체제가 이미 60년 이상 지속되고 평화협정은 여전히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협정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주장이 여전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작년말 합의는 문제의 끝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양호한 한일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역사전” 안에 문제가 자리하는 것으로 오히려 위안부 문제가 한일간의 긴장을 높이는 것으로 귀결하는 상황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한일이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협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서 전개돼 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기조보고나 그에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여전히 정전협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논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저는 이 정전협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회의에서는 이렇게 한일의 지성이 모였으니까 지혜를 모아서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진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할 자리로 하려고 주최자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 ””기억”과 산다”에서 피력된 할머니들의 한마디한마디와 일거수일투족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귀향”을 보고 이 영화를 보신 한국 분들이나 그 이외 분들이 무엇을 생각할까 상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진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층 더 강하게 가졌습니다. 또한 저는 쓰카고헤이 연극을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거기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작품 중에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귀중한 시사를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입장이 다른 그런 차이점이 있는 한, 결국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서로 공감하여 의논하는 공통의 자리를 만들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송구하지만 1980년대 후반 한국이 격동하는 시기에 3년반 유학했습니다. 한국사회는 깊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고 저를 연구자로 길러줬습니다. 저도 한국사회의 날카로우면서도 지적으로 성실한 점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벌써 4 반세기가 지나서 한국사회는 자유롭고 민주적 세계로 변하고 한일관계도 크게 변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일간의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 상황과 비교하면 현재가 자유롭고 활달한 의논을 서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조건이 더 나아졌을 겁니다. 오늘 회의가 “지적 체념”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적 도전”의 자리가 될 것을 바라며 주최자 인사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부디 오늘하루 지적으로 성실한 의논을 부탁드립니다.

번역: 하시모토 시게루(도쿄대학교 한국학연구부문 특임연구원)